241118 매체모니터링\_전선정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유죄 판결 관련 사설>**

-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 민주당 주말 집회 등에서 “미친 판결”이라며 공세에 나서

**경향 /**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판결과 김 여사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

**한겨레** **/ <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진행 중인 재판들도 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할 것”

**동아** **/ <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률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 **/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중앙** **/ <항소는 장외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장외 선동이 아니라 법리로 대응하되 사법부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일단 겸허히 1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

**[봉] 한겨레가 제일 비겁하다. 대안언론으로의 구실을 못한다.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중립에 기어를 넣고 달릴 수 없는데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 공부를 하지 않아서이다. 진보 언론의 맏형으로서 지위만 누렸다. 열심히 공부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결여되면 저렇게 된다. 기득권층에 편입. 메이저언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다. 경향도 한때 봉급이 적었다. 진보언론으로서 정체성이 뚜렷.**

**<APEC>**

**경향** **/** **<한·일 “공조 더 긴밀하게…트럼프 정부서도 ‘3국 협력’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한겨레 / <2년 만에 29분, 한-중 정상 “양국 갈등 완화해야”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는 데 뜻을 모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제안. 러-북 군사협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양국 관계 개선이 필수란 판단에 따른 것.

**한국 / <한국-중국 릴레이 APEC 의장 맡아..내년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 굳히기>**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기정사실화. 2025년 한국에 이어 2026년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 때문. 차기 의장국은 직전 연도 회의에 참석하는 게 관례. 최근 중국이 전례 없는 '한국인 무비자 조치'를 발표하고 미뤘던 '주한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한국을 향한 유화 제스처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 분위기와 맞물려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급물살을 탈 전망.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

**동아 / <“訪韓 검토” 밝혔던 시진핑… 尹에 ‘먼저 중국 방문’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중국 견제 전략을 예고한 만큼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말라고 시 주석이 한국에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 /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할 듯>**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시 주석 참석은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해석된다. 성사되면 11년 만의 방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공석이던 주한 중국 대사 임명에 이어 2년 만에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양새”

**중앙일보 /**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시진핑도 달라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한·미·일이 공통된 목소리를 낸 것에 주목. “APEC 정상회의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무대가 됐다”, “(미중 정상회담) 당시만 해도 다른 굵직한 현안들에 밀려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파병이라는 무리수 감행으로 오히려 미·중 간 의제 중 우선순위가 높아진 셈”

**<정부>**

**경향 /** **<[단독]“명태균, 대선 때 김건희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도 알았다”···긴밀관계 유지 정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 해당 서면조사 사실이 1년 뒤에나 알려졌다는 점에서 극비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으로 풀이.

**한겨레** **/ <비 오는 광화문 메운 ‘윤 퇴진’ 촛불행렬…“국민 뜻 깡그리 무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등 주요 시민단체가 꾸린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 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을 열었다. 그간 촛불행동 등 일부 단체와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행동이 주요 시민사회단체로까지 외연을 넓힌 것. 이날 행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도 앞서 열린 ‘제3차 국민행동의 날’을 마치고 합류.

**한국** **/ <[단독] 명태균, "尹 당선되면 공천 줄게" 지방선거 예비후보 설득>**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측이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 검찰은 명씨가 해당 자금을 윤 대통령 측에 제시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투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가 이뤄진 경위와 성격, 이를 명씨가 각종 선거 개입 시도에 활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

**동아 /** **<[단독]명태균, 창원산단관련 시장과 회동… 대외비 문건 보고받은 사실도 시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사진)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3자 회동을 하고,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보고를 받는 등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 검찰은 명 씨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게 됐는지 여부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

**조선 / <“김여사 문제 어물쩍 넘어가선 안돼… 회견 때 했던 약속 지켜야”>**

여권 인사와 정치 전문가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용산과 정부, 여당이 혁신에 나설 때”라고 했다. 이들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당정(黨政) 지지율이 반등하길 기대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이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통해 국민 기대에 맞는 국정 기조의 변화를 보여줘야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인사>**

**경향 /** **<또 즉흥적, 충성파로…트럼프, 에너지장관에 ‘석유 재벌’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에너지부 장관에 정치 경험이 없는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전문성, 경력과 무관하게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을 요직에 지명하는 파격 인선이 계속되면서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 **<트럼프, 에너지장관에 ‘기후위기 부정’ 석유업체 경영자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6일(현지시각) 석유 회사 경영자이자 기후변화 대응 반대론자인 크리스 라이트를 에너지장관으로 지명했다.

\*에너지부 / 에너지 정책, 원자력 개발, 핵무기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부처

**한국 /** **<트럼프 흔드는 머스크, 재무장관 인선 '막후 암투' 공개 표출>**

올해 7월부터 '트럼프 지지'를 밝힌 뒤 4개월간 물심양면 지원해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재무장관 후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 사실상 다른 인물을 재무장관에 지명하라고 트럼프를 압박하는 행보로 해석됐고, 기존 참모들은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동아 /** **<트럼프, 딥스테이트 해체-의회 무력화… 무소불위 백악관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작은 정부, 낮은 세금’을 넘어 권력 구조 자체를 개편하려 한다는 분석.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기득권 관료집단)’ 해체를 명분으로, 인사 비준권과 예산 편성권 등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까지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삼권 분립의 균형 및 견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려 할 수 있단 우려.

**조선 /** **<美 에너지 장관 된 ‘석유 재벌’... 친환경 정책 줄폐기 예고>**

트럼프는 라이트의 지명을 통해 국가에너지회의 및 담당 장관들을 필두로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후 위기 정책 폐기를 본격화하는 한편,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전망.

**중앙 /** **<최연소 ‘백악관의 입’ 탄생…트럼프, 27세 레빗 발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출범할 2기 행정부 인선을 속전속결로 발표하는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으로 대선 캠프 대변인이던 캐럴라인 레빗(27)을 발탁.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지금까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은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론 지글러로, 그가 대변인으로 임명된 1969년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

[봉] 단임제 폐단 중 하나가 책임정치가 안 된다. 잘하면 재선 못하면 못하게. 우리나라 모든 정치 프레이밍은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삶이 어떻고 이런 것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트럼프 1기 때 네오콘이 있었다. 볼턴. 볼턴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북미관계를 제대로 해결 못했다. 하노이회담 때 볼턴이 훼방을 놓았다. 이동복 극우 인사. 훈령을 안 지킨다. 매파들은 확실하다. 정부 훈령을 안 지키고 파투내는 게 목적. 박찬수 대기자가 쓴 문재인 관련 칼럼. 트럼프와 김정은을 어떻게 다루는가. 트럼프는 문재인을 까다로워했다.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노벨상도 가능하다, 라고 꼬셨다. 트럼프도 명예욕이 있는 사람. 노벨상 외신에도 나오고 한다. 전쟁 2개 끝내고, 북미대화 열리면 노벨상 가능. 현안과 밀접한 노벨 평화상. 평화상 받은 이후에 취소 못해서 받은 사람 중 엉터리가 많다. 일론 머스크(정용진보다 더 심한 또라이 CEO 관종기질), 보건부 장관(백신 음모론 제기) 1기 때는 2기(재선 가능성) 때문에라도 여론 신경 쓸 수 밖에. 트럼프는 여론에 민감하지만, 이미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두 또라이지만 또라이여도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은 무식하지만, 트럼프는 협상에 능숙.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없다. 외교 경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니까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내세워서 이기게 해야 한다는 정서가 지배. 군수업자, 설비업자들이 서로 크로스로 주식 보유. 그런 사람들이 동부의 엘리트 펜실베이니아니 초기 13개주 생리적으로 안 맞는다. 안 맞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숙주를 갈아탔다. 극우, 일베 쪽이 민주당으로 갈아탔다. 러스트벨트 중심으로 실업자, 혹은 백인 엘리트들 대부분 트럼프를 찍은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선거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다. 단임제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재선 가능하게 하면 (한국 대통령 권한 가장 강력해) 김여사의 대외활동엔 문제가 없다 대내활동이 문제. 베갯머리 송사로 시작한다. 거기서 어찌구 저찌구 떠드는 게 문제. 외척이 문제.

**<그 외>**

**경향 /** **<1로 살고 싶지만 이토록 선명한 2앞에서···“나는 살고 싶었다”[트랜스젠더청년 3인의 이야기]>**

트랜스젠더 남성 이진혁씨(25·가명)는 “죽는 게 너무 무섭지만, 죽음보다 삶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두 손을 모아 잡은 이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래가 두렵기만 하다. 이씨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지난달 18일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트랜스젠더 청년 8명 중 1명이다.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주거비·생활비·의료비·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해 이들이 경제·사회적 차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민간을 통틀어 국내 트랜스젠더를 지원한 첫번째 사례다. 성별 정정으로 군에서 직위가 해제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싸우다 숨진 변희수 하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트랜스젠더 청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차별·혐오 여전한 사회…“여성 목소리 지지하는 공간 절실”>**

문제는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공학 전환을 논의하면서 일이 커졌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 때문. 학생들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째 학교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기물파손에 수업거부 운동까지 벌이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피해액이 54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하면서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 때문에 학교를 부수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상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의아해하기도.

**[봉] 산업현장에서 집단손해배상제. 일종의 금융치료. 갚을 능력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절차적으로 민주성이 전혀 없다.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가치가 충돌할 때는 민주성에 주목해야 한다. (타당성, 정의성, 민주성) 학생 등록금으로 유지되는 재단. 제일 오래된 대학은 1088년 소르본느 파리대학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탈리아의 볼라브루 대학이 최초의 대학. 학교 주인은 학생. 그런 정통이 사라지고 유럽에서는 나라에서 등록금을 대주기라도 하지 한국에서는 등록금 내는 주체가 학생. 자본주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저건 아니다. 얼마나 비교육적 비민주적. 노조 보고 배운 것. 노조 다루는 기업들 보고 배운 것 학교에 신자유주의가 들어가고 경영학과 출신 교수들이, 재단과 가까운 교수들이 총장 많이 해. 친일파가 세운 학교들이 방어 논리를 펴다 보니까 .. 진압하다보니 설립자 떠받들어야 하고 동상 있고. 경희대 신흥대학이었다. 신흥무관학교. 조형식. 저런 차원에서 쓰면 되는 것. 앞에 두 가지는 논리로 재단하기 어렵다. 민주성에 주목해서 해당 사안을 논하면 도움이 될 것. INFLUENTIAL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드러내는 명확한 글을 쓸 것.**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학 전환 문제로 보지 않았다. 동덕여대에서 만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안밖의 성범죄와 여성혐오를 언급. 학교 밖에선 교제살인으로 한 해 최소 100여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다는 통계. 학교 내에선 ‘알몸남’이 교실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협과 혐오를 막아내온 여대라는 공간적 특수성이 공학으로 전환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는 것.

여대가 ‘여성만의 안전한 공간’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권김 소장, “동덕·성신·숙명여대 모두 2015년 이후 여성학 강좌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면서 여성 고등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진 것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줬을 것”,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한 리더십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 기지촌 여성과 그 후손들 위해”···국가폭력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레이스 M 조 뉴욕 시립 스태튼아일랜드대학 사회학·인류학 교수는 미군 기지촌 여성의 후손이다. 지난해 한국어로 번역된 그의 책 <전쟁 같은 맛>(글항아리)은 한국전쟁과 기지촌 생활, 미국 이민과 조현병을 살아낸 어머니 ‘군자’의 생애를 담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13일 어머니와 비슷한 삶을 살아낸 여성들이 머물렀을 경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철거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철거 저지 농성장을 찾았다.

성병관리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방조해온 흔적. 정부는 성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이곳에 여성들을 강제 수용. 여성들이 철창 안에 갇힌 원숭이 신세라는 뜻에서 ‘몽키하우스’라고도 불려. 동두천시는 이 일대를 소요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혀.

조 교수는 성병관리소 철거는 단순히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 조 교수, “국가는 폭력과 부정의를 토대로 세워지기 마련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기에 또 다른 폭력이 반복되는 것”,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한겨레 / <[현장] 구호조차 못 외칠 바엔…‘침묵’ 택한 기후총회 활동가들>**

아프리카 국가들부터, 군소도서국 등 다양한 나라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 수백명은 기후총회 회의장과 언론 행사장이 있는 블루존 디(D)구역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기후재원 확보하라’, ‘아이들을 위한 총회 만들라’,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땅과 식량’ 등 다양한 구호가 적힌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었지만, 묵언수행하듯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입을 다문 채 낮은 음으로 웅얼거릴 뿐이었다. 예년 기후총회와 달리, 모든 행사가 실내에서 열린다는 이유로 총회 사무국이 구호나 노래, 마이크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새로운 규칙에 항의해 아예 침묵시위를 하기로 했다.

세계 기후환경단체의 연대체인 캔(CAN·Climate Action Network-International) 소속인 쉬콘고는 “기후총회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우리를 침묵시키려 한다. 펼침막은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고 매일 행동(‘기후액션’)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일정이 바뀌어 제대로 된 시위를 못하고 있다”라며 “기후총회가 열리는 공간에서도 분명한 검열과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우리는 안에서든 밖에서든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천으로 된 펼침막을 높이 들어보였다.

**<‘세금 깎아줄게, 결혼하고 애 낳을래?’…“2030에 통할 리가”>**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 감면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20∼30대는 애초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아 1인당 조세 감면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조세 지원은 필연적으로 조세 부담이 많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쏠리는 만큼, 재정 지원이 저출생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올해 제주4·3영화제 화두는 ‘세계의 구조적 폭력’>**

폭력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침묵했다.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 그들은 말 대신 몸으로 그날을 증언한다. 폭력을 고발하고 인권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제2회 제주4·3영화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열린다. 제주4·3평화재단 주최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부조리한 폭력에 저항하는 자존의 빛이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하는 연민의 의미를 담아 `틈새에서 솟아오른 빛'으로 잡았다. 영화제는 국내외 장편과 단편 경쟁 10편을 포함해 모두 29편을 선보인다. 올해의 특별 시선(구조적 폭력), 묵직한 공명, 4·3과 저널리즘, 단편 경쟁 ‘불란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편 경쟁은 올해 새로 도입했다.

[봉] 국내적으로는 국가폭력. 세계적으로는 제국주의 폭력. 43도 그렇고 (미군이 완전한 포위) 초토화작전은 미군이 가는 곳마다 그랬다. 베트남에 고엽제 뿌린 것도 베트콩들의 본거지를 없애기 위해. 반전운동 미국의 히피가 주도. 청년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으로 인한 범죄 발생률 높았다. 전쟁 가면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들어. 가서 영화를 봐야 쓸 게 생긴다. 국가폭력과 제국주의 폭력을 다룬 영화들이 여러 개 있다.

**한국일보 / <‘헛돈’ 된 기후변화 연구비... 윤 정부 R&D 삭감에 연구 중단 5배 폭증>**

윤석열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중단된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은 지난해보다 5배가량 더 많았는데, 절반 이상이 '연구비 삭감' 탓이었다.

**동아일보 / <“생각 않고 빨리 답얻는 AI교과서…사고력 더 떨어질것”>**

교육부는 내년 3월 1학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영어, 수학, 정보 수업에 도입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 정책이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3월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9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4%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 참여한 고교 교사는 “애들한테 인터넷으로 글을 읽고 방금 뭐를 읽었냐고 물어보자 ‘모르겠다’고 하더라”라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디지털로 읽은 건 금방 기억에서 사라져 휘발성도 강하다”고 주장했다.

[봉] 휴대폰에 사진 잔뜩 찍어놓고 잃어버리면… 돌칼로 긁어서 원시적으로 그림 그리면 그림이 문자보다 빠르다. 기록이 어떤 위대성. 디지털 시대보다 훨씬 강한 것. 기록의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 디지털은 쉽게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쓸 때 디지털 교과서 반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으면 좋을 것.

**<노인 절반 “아파도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다”>**

몸이 아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고령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에게 신세를 지는 것보다 살던 집에 머물면서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전문 요양시설의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고령자가 많지만 거주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낮은 계단 단차, 낙상 방지 바닥재 등을 갖췄는지 물어본 결과 62.1%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교통수단 부족 등으로 외출 시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주보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한국도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의 욕구와 필요가 적절히 반영된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 <“군함도 징용 피해자, 원폭 희생자들의 처절한 삶 복원”>**

지난 13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희생자의 증언을 담은 작품이다. 재일조선인 2세 박수남(89) 감독이 딸 박마의(56) 감독과 공동 연출했다.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의 이중 고난을 기록한 첫 다큐 ‘또 하나의 히로시마-아리랑의 노래’(1986), 강제 징용 조선인·위안부를 좇은 ‘아리랑의 노래-오키나와에서의 증언’(1991) 등을 연출한 박수남 감독의 다섯번째 작품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천황이 신이라 믿었던 박수남 감독은 다섯 살 때 처음으로 조선인 정체성에 눈떴다고 한다. 한복 차림의 어머니 손을 잡고 길을 가다 돌팔매와 함께 “조센징, 더러워. 돌아가!”라는 혐오 발언을 듣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1958년 일본인 여학생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재일조선인 2세 청년 이진우 사건(고마쓰가와 사건)을 계기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자문하게 됐다.

그가 이진우의 갱생을 위해 주고받은 옥중서신을 엮은 『죄와 죽음과 사랑과』(1963)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펜을 놓고 카메라를 들게 된 건 피해자들의 떨리는 몸, 고통스러운 침묵을 담기 위해서다. 군함도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며 다큐를 만들어왔다.

**<칼럼 및 오피니언>**

**경향 / <[NGO 발언대]의료급여 개악으로 허물어지는 울타리>**

건강생활유지비는 2007년,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함께 처음 도입됐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간다며 1000원, 혹은 2000원의 진료비를 부과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비판을 의식해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는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잘못된 변화를 결코 상쇄하지 않았다. ‘가급적 병원에 가지 말 것’, ‘병원에 가는 것은 재정에 민폐’라는 메시지는 확고히 관철됐다.

사회보장제도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경로는 여러 사회와 제도에서 비슷하게 반복된다. 가장 손쉬운 길은 제도의 수급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제도가 극소수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제도의 수준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지면 제도의 의미도 실제 퇴색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낙후시키는 전략이다. 의료급여를 지급하지만 실제 필요한 만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두지는 않겠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정률제 도입이 낳을 효과다.

노화나 질병, 빈곤과 같은 누구나 한번쯤 겪을 일을 두고 스스로를 ‘짐’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시민들은 불행하다. 게다가 한번 허물어진 제도는 더 쉽게 엉망이 된다. 무상이었던 수급자의 의료 이용에 정액의 요금을 도입한 보건복지부는 정률로 금액을 올리려 하고 있고, 이에 성공하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자의 부담과 재정을 통제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넘어 건강보험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조치들도 이어질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와 서로를 ‘짐’으로 여기는 것도, 그 무게도 기하급수 늘어날 것이다.

[봉] 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십 몇 만원 낸다. 너무 아깝잖아. 요즘은 보험금 많이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 한달 약값 8~90만원 내지만 5%만 부담한다. 그러나 안 행복하다. **보험료는 엄청 내고(소득이 많다는 뜻),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보험료 많이 타먹는 게 사실 불행한 것. 보험료 많이 내는 걸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보편복지가 안 된다. 핀란드의 부자에겐 소득세가 거의 50% 부과됨. 불평이 없다. 복지는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 행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 돈을 많이 내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과 그럼에도 그걸 안 찾는 게 행복한 거구나.

**<[시선]염치없는 사회>**

염치(廉恥)라는 단어는 청렴할 염(廉)과 부끄러울 치(恥)라는 한자가 모여 만들어졌다. ‘염조(廉操)와 지치(知恥)’의 줄임말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청렴하여 지조를 지키고(廉操), 수치심을 아는 것(知恥)인데, 흔히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염치가 없어진다.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그렇다는 말이다. 194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모인 전 세계 사람들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몇년 뒤인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이 통과되었다. 참혹한 세계전쟁을 경험하고 깨친 반성과 성찰의 결과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에서는 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분초 단위로 거래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자”로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 100만원에 쓸 수 있는 돌봄노동자를 수입해오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하면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며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제안한다.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근본에는 외국인은 우리와 달리 대우해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

**한겨레 / <그 ‘불법’ 집회가 없었다면 [한겨레 프리즘]>**

이윽고 한발 떨어진 채 연민, 안타까운 마음 정도로 지켜봤던 지난 집회들을 되짚었다. 만약 그 집회가 없었다면. 어르신들이 처참히 끌려 나온 2013~2014년 밀양 송전탑 집회가 없었다면 ‘생태’나 ‘공동체’ 같은 단어를 지금처럼 느낄까. 100여명이 연행된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없었다면 ‘안전’과 ‘생명’은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가 됐을까. 2016년 촛불집회가 없었다면 ‘공정’과 ‘상식’이란 단골 어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생태, 공동체, 안전, 생명, 공정, 상식. 2024년 한국에서 모두가 제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단어를 지나온 집회는 앞서 품고 있었다.

깨달음이라기엔 면구한 상식이다. 집회의 자유는 ‘안타까운 그들’을 보호하는 시혜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견하기 위한 토대에 가깝다. 구태여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다. 민주화 이후, 실은 그 이전부터 집회에서 외친 단어들을 바탕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사회 맥락에선 한층 그렇다.

**한국 / <보존하는 유럽, 부수는 대한민국 [삶과 문화]>**

뮌헨을 시작으로 뉘른베르크, 드레스덴, 베를린까지 독일 동쪽 지역을 여행했다. 유럽 도시들의 아름다움이야 ‘말해 뭐 해?’지만, 독일의 경우 조금 더 인상적인 면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검게 그을린 건물이 많이 보이는데도 이를 부수지 않고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해 둔 것이 참 부러웠다. 유럽의 아름다움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과거 건축물 등 아름다운 유산들을 그대로 잘 보존한 데 있을 것이다.

건설 자본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대는 것에 익숙하다. 안전 진단 하위권 판정을 받았는데, '경축'이라며 플래카드를 내건다. 대한민국에서 건물은 그저 투자 대상이자 나의 사적 소유물일 뿐, 공공적 의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그 결과는 현재 우리가 보는 아파트로 가득 찬 도시의 모습이다(그 넘치는 아파트 중 내 집이 없다는 사실은 덤이다).

[봉] 전쟁은 도시계획자들의 꿈. 폐허가 되면 새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쟁 이후에 바뀐 곳이 안동. 폭격을 엄청 맞았다. 진해도 그렇고 계획도시들. 계획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나폴레옹 3세가 집권 파리개조계획 보수 반동이 일어나서 공간구조는 권력구조와 같이 간다. 강력한 황제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 상젤리제다 프랑스의 권위를 나타내는… 민주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권력. 개선문 확대 등 컨셉이.. 베를린도 그렇게 될 뻔. 거대 건축 콤플렉스에.. 스타디움 건설하다가 전쟁 물자 부족해져서 못 짓고 그랬다. 독일은 특히 콤플렉스에 시달려. 게르만은 변방. 합스부르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명문가가 아니다. 로마에 대한 콤플렉스. 건축물에 드러난다.

**동아 / <“시장선도자처럼 전쟁도 선공이 유리”… 이스라엘-아랍 ‘기습의 악순환’[권오상의 전쟁으로 읽는 경제]>**

먼저 공격하는 이점이 실제로 크다면 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의하면 선제공격으로 올라가는 경제적 이익의 기댓값 증가분이 전쟁 비용보다 크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게 합리적이다. 이러한 전쟁을 가리켜 기습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1973년의 전쟁은 말하자면 기습 전쟁이었다.

먼저 공격하는 이점이 크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임 이론의 결론은 그걸로 끝이 아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두 상대방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할 때, 전쟁을 통한 이익의 기댓값보다 양쪽 모두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협상안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쟁은 전쟁을 치르는 비용이 들기에 효율적이지 않다. 정치학은 이를 두고 ‘전쟁의 비효율성 퍼즐’이라고 부른다. 달리 말해 경제학의 게임 이론으로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중앙 / [김정기의 소통카페] 정답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교육**

토론의 부진과 부재는 주입식 교육의 병폐를 강화하고 자기 방식의 지식을 쌓는 기회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주입된 지식은 머리에만 축적되고 가슴에는 남지 않을 공산이 크다. 생각과 감정과 토론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식이어야 가슴으로 내려가 공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감의 여과 과정이 배제된 정보와 지식은 지혜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런 교육 환경이 미증유의 의료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논쟁보다는 환자들의 생명을 두고 의사 전용 카페에서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허망한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의료현장에 남아 절박한 환자의 생명을 치료하는 동료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조롱하는 무자비한 린치도 마찬가지다.

정답 만능주의의 누적은 동료를 함께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이겨내야 할 경쟁자로 여기는 풍토로 만든다. 상대와 공생하는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을 체험하고 배양할 여지를 앗아간다. 당연한 상호공존의 바탕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기 위주의 입장에서 설정케 하여 건강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물론이고 협력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식과 책임감을 희박하게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하나의 답만을 내세우는 교육체제가 우리 학생들의 사고를 ‘정답의 감옥’에 가두어서 한 가지 관점만이 옳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창의성과 다양성의 바탕이 되는 ‘생각의 탄생’은 봉쇄되고 계발되지 못한다. 의대 진학에 올인하는 ‘의대 광풍’도 자신의 취향에 대한 깊은 생각보다는 정답을 고르는 능력에 따라 수입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믿음이 불러온 것이다. 심지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준비반’이 만들어지고, 학원 차량을 보는 게 낯설지 않게 되었다.

**<민들레>**

**압축붕괴사회에서 초록문명 생명사회로!**

7개의 대형 태풍은 유럽의 탄소국경 조정제, 미국의 청정경쟁법, EU공급망 실사 지침, UN의 ESG 공시 의무제, RE100, 혁신 단계를 지나 독점화 단계에 이른 빅 테크-소버린 AI를 의미하고, 2개의 대형 지진은 중국산업 경쟁력의 한국 추월, 남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미 🡪 이 위기를 잘 살려 문명전환과 새로운 전환경제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한 압축적 성장이 압축적 붕괴 소멸사회로 접어들었다 함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말일까? 첫째로는 현생인류 초유의 0.72 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지역소멸에 처해 있음. 두 번째는 설상가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한국경제가 붕괴의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

국가 행정체제도 읍면동을 기초자치체로 독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체제를 정착시키며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와 협치 융합하는 연방국가를 모색할 때가 왔다. 이러한 혁신적 국가체제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가운데,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4km(15분거리 생활권) 정치경제 시스템, 즉 읍면동 단위의 마을자치 생명살림 정치경제시스템 구축이다. 이러한 시스템이야말로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와 노인이 안심되는 마을 만들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8대 재벌이 독식하는 에너지 독점으로부터 재생에너지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에너지 분산과 분권의 전환경제를 구축하고, RE100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산업체제가 붕괴되는 바로 그곳에서 초록문명 생명사회 인프라와 대안의 싹을 틔우면서, 지금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는 것이다. 이제 살길은 새로운 전환경제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전환경제의 물적 토대 형성과 초록문명 생명사회를 싹 틔우는 세력의 성장은 시대적 요청이다.

**오늘부터 '법원 결정 존중한다'는 말 하지 않겠다**

세상의 일에는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일이 있고 도덕적 비난으로 그칠 일이 있습니다. 법이 나서야 할 일이 있고 개인이나 선관위 같은 기관의 자율 영역에 맡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법이 나서는 건 법의 과잉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는 법이 나서지 않을 일에 법을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기억이나 주관적 판단, 느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관련 규정에서 ‘행위’가 포함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낄끼빠빠, 법도 낄 데 끼고 빠질 데는 빠져야 권위가 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노동이사는 공공성 이슈에서 고립 두려워 말아야**

그렇다면 노동이사의 역할은 회사를 위하여 일하되 구체적으로는 “공공성의 강화와 투명경영”에 힘쓰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노동이사가 회사의 공공성과 투명경영을 위해 일한다면 그 관점은 노동자성에서 출발한다. 정부나 경영진을 위해 일할 이사가 모자라서 직원까지 노동이사로 동원한 것은 아니다.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관점을 외면한다면 노동이사제란 결국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이사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공공기관 탄소중립 목표관리제는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녹색연합(2024)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둘 가운데 하나(52.6%)에 불과했다.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닻을 올렸다. 중앙공공기관에서는 202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그것이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노동이사의 정체성조차 정립되지 않았거니와 역할도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노동이사제는 언젠가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해야 한다. 그 핵심은 노동이사의 역할이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점을 노동이사들이 먼저 확인하고 나아가 그 성과를 국민이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야 법도 제정된다.

**유엔 조사특위 "이스라엘군 학살, 제노사이드에 해당"**

"이스라엘군이 자행한 대대적 파괴 행위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특징에 부합한다." 유엔총회 산하 '이스라엘 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0·7 하마스의 기습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은 올해 초반까지 핵폭탄 2개에 맞먹는 2만5000톤의 폭탄을 가자에 투하해 식수·위생 시스템 붕괴, 농업 황폐화, 유독성 오염 등을 초래했으며 이는 향후 몇 세대에 걸쳐 가자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류 최악의 범죄인 '제노사이드'의 대표적 사례는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홀로코스트이다. 1948년 채택된 유엔 제노사이드 범죄 방치·처벌 협약(CPPCG)에는 "통상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 다른, 아니 더 처참한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로 탈바꿈한 셈이다.